[칼럼]

# 1971년에 멈춰 선 국가 교육재정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신산업 시대의 중심에 설 수 있는가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

1971년「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은 단순한 예산 배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가 나아갈 길에 대한 선언이었다. 산업화로 경제를 일으켜야 했던 그 시대, 공장과 산업 현장이 요구한 것은 읽고 쓰고 셈할 줄 아는, 초·중등 교육을 마친 인력이었다. 그래서 국가는 가난한 살림에도 내국세의 11.8%를 떼어 초·중등 교육에 쏟았다. 문맹을 없애고 모두에게 기초 교육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그 시대의 국가경쟁력 전략이었다.

그 결단은 옳았다. 어려운 시절이였지만 국가의 지원으로 교육을 받은 인력은 산업을 고도화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맞물려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로 끌어올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떠받친 국가 발전의 황금기였다. 그런데 그 이후는 어떠한가.

초·중등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했던 시대가 있었다. 대학에 가는 이가 열에 셋뿐이고 산업이 초·중등 수준의 인력을 원하던 때, 그 집중은 절대적으로 옳았다. 그러나 지금은 열에 일곱이 대학에 가고, AI와 첨단 기술이 주도하는 신산업이 고도 전문 인력을 요구하는 시대다. 교육정책의 무게중심은 이미 오래전 '초·중등 집중'에서 '초·중등과 고등의 균형'으로 옮겨갔어야 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인구도, 산업도, 진학률도 모두 뒤집히는 동안 교육재정의 골격만은 그대로다. 2025년 출생아는 25만 명 안팎으로 1971년의 4분의 1인데, 11.8%였던 교부율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내내 거꾸로 올라 2020년 20.79%에 이르렀다. 그 결과 초·중

등 교부금은 72조 원으로 불어나 수십조 원이 기금으로 쌓이는 반면, 고등교육에는 그런 법적 근거조차 없다. 대학 예산은 매년 심사대에 올라 그때그때 정해지고, 2030년 일몰이 걸린 한시 특별회계에 기대 연명한다.

격차는 금액에만 있지 않다.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0%를 넘는 세계 최상위권인데, 고등교육은 60%대에 머문다. 세계 10위권 경제를 이룬 나라가, 정작 그 경제를 다음 단계로 끌고 갈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OECD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이다. 가장 많은 청년이 도달하는 단계에,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단계에 가장 적게 투자하는 역설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부족한 예산마저 최근 거점 국립대 몇 곳으로 쏠린다는 점이다. 지역 균형이라는 명분은 옳다. 그러나 지역 인재의 80% 이상을 길러내는 곳은 사립대다. 늘어난 돈이 소수 국립대에 집중되는 사이, 대다수 학생이 다니는 대학은 십수 년째 등록금 동결과 학생 감소로 한계에 내몰렸다.

여기에 우리의 모순이 있다. 가난하던 1971년, 국가는 미래를 보고 교육에 투자했다. 세계 10위권 경제국이 된 지금, 국가는 오히려 미래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다. 가난할 때 했던 결단을 부유해진 지금 못 하고 있다. 산업은 신산업으로 갔고 아이들은 대학으로 향하는데, 교육재정의 골격만은 1971년의 그날에 박제된 채 멈춰 서 있다.

답은 명확하다. 초·중등 재정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되듯, 고등교육에도 법정 재원의 토대를 놓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는 17대부터 20대 국회까지 10건이 발의됐다가 번번이 폐기된 교육계의 숙원이다. 초·중등의 몫을 빼앗자는 것이 아니다. 초·중등이 길러낸 아이들의 다음 단계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시대에 맞게 균형을 다시 맞추자는 것이다.

1971년의 결단은 그 시대를 살린 생명이었다. 그러나 생명도 시대가 끝나면 박제가 된다. 이제 그 박제를 깨고, 신산업 시대에 맞는 재정의 골격을 다시 세울 때다. 1971년 가난 속에서 미래를 선택했던 그 결단이, 2026년 다시 요구된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지금 법으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방치할 것인가.